



タイトル Title	문재인 정부의 대학 등록금 정책과 그 평가(The evaluation of the university tuition fee policy of the Moon Jae-in government)
著者 Author(s)	정, 병호
掲載誌・巻号・ページ Citation	高等教育における経済的負担軽減及び修学支援に係る法・制度・行財政の日韓比較研究:
刊行日 Issue date	
資源タイプ Resource Type	Research Paper / 研究報告書
版区分 Resource Version	author
権利 Rights	
DOI	
JaLDOI	
URL	<a href="http://www.lib.kobe-u.ac.jp/handle_kernel/81012464">http://www.lib.kobe-u.ac.jp/handle_kernel/81012464</a>

## 문재인 정부의 대학 등록금 정책과 그 평가

# The evaluation of the university tuition fee policy of the Moon Jae-in government

정병호(서울시립대학교 교수)<sup>1</sup>

### 1. 문재인 대통령 선거 공약과 이행 평가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에 의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 결정되자 5월 9일 제19대 대통령선거가 실시되었고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41.08%를 득표하여 당선되었다.<sup>2</sup> 다음날인 2017년 5월 10일부터 즉시 문재인 대통령의 5년 임기가 시작되었다. 먼저 대학 등록금과 관련한 여당의 대통령선거 공약은 다음과 같다. 문재인 정부는 “생애수요자 맞춤형 교육비 지원을 통해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공약 중 하나로 ‘대학 등록금 부담 획기적 경감’을 약속했다. 세부적으로는 ‘반값등록금 추진’, ‘대학 입학금 폐지’, ‘학자금 대출 이자 부담 완화’를 공약했다.<sup>3</sup>

#### (1) 대학 입학금 폐지(이행 완료)

---

1 정병호, 鄭炳浩, Jung Byoung Ho/민법/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Univ. of Seoul, Law School) 교수/ 로마법상 부당이득에 있어 재산법적 사고와 물권법적 사고, 금전은 점유하는 자가 소유한다는 이론 비판 등

2 77% 투표율을 기록한 이 선거에서 자유한국당 (현 미래통합당의 전신. 미래통합당은 2020년 8월 말 현재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주도로 다시 개명을 준비하고 있다) 홍준표 후보 24.0%,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21.4%,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6.8%, 정의당 심상정 후보 6.2%의 득표율을 얻었다.

3 아래의 공약이행 평가는 2020-04-24 문재인미터를 참조하였다. 문재인미터는 팩트체크 미디어 뉴스톱과 사단법인 코드가 만든 문재인 정부 대선공약체크 사이트입니다. 공약 이행 평가에는 뉴스톱의 팩트체커들과 다양한 언론,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합니다.

대학 입학금 폐지는 이미 이행을 완료한 것으로 평가된다. 입학금은 그 성격과 징수목적 뿐만 아니라 산정근거 조차도 불분명해 대학별로 금액이 천차만별이어서<sup>4</sup> 계속 논란이 돼 왔다. 입학금폐지는 국공립대(41개. 이 중에는 2년제인 道立大도 포함됨)로부터 시작하여 사립대로 확산되었다. 2017년 7월 지방의 국립대인 군산대가 최초로 입학금 폐지를 선언한 후, 8월 개최된 국·공립대총장협의회 제3차 정기총회에서 모든 국공립대학의 입학금 폐지가 결정되었다. 사립대의 입학금 폐지는 우여곡절이 있었으나<sup>5</sup>, 11월 교육부가 학생도 참여시킨 '대학·학생·정부 간 입학금 제도 개선 협의체'(이하 협의체)를 구성하여 논의한 결과, 11월 24일 3차 회의에서 대학 입학금 전면 폐지를 최종 합의했다. 4년제 사립대학 156곳 중 입학금이 평균(77만3천원) 미만인 95곳은 입학금 가운데 입학 관련 업무 실비용(20%)을 제외한 금액(80%)을,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에 걸쳐 매년 20%씩 줄이고, 입학금이 평균 이상인 대학 61곳은 2022년까지 5년에 걸쳐 해마다 16%씩 줄이기로 했다. 입학금 실비용(20%)은 감축 단계에는 국가장학금(Ⅱ유형)으로 지원하고, 2022년 이후는 신입생 등록금으로 산입하되 해당 금액만큼 국가장학금으로 지원해 학생 부담을 해소하기로 했다. 다른 한편 2년제 사립 전문대의 경우에도 2018년 1월 교육부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가 입학금의 단계적 폐지에 합의했다. 하지만 사립 전문대의 등록금수입구조의 특수성과 재정적 어려움을 고려해 입학금 전부가 아니라 67%만을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13.4%씩 감축기로 했다. 마침내 2019년 12월 3일 고등교육법 제11조 제2항<sup>6</sup>이 신설되어 대학입학금 징수금지의 법

---

4 2017년 기준, 국공립대 입학금은 평균 약 15만원, 사립대의 경우 77만원이었다.

5 9월 교육부는 입학금 축소 방안 마련하기 위해 4년제 사립대와 함께 '사립대 입학금 제도 개선 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구성하여 논의를 시작했으나, 한국사립대총장협의회(이하 사총협)는 대학 입학금 폐지는 시기상조이고 대학 재정확충과 연계해 추진해야 한다며 입학금 폐지에 따른 재정보존을 위해 등록금 인상안 등을 제시해 입학금 폐지 논의가 결렬되기도 했다.

6 ②제1항[등록금 징수 근거규정]에도 학교(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은 제외한다)의 설립자·경영자는 해당 학교에 입학 또는 편입학하는 사람(제29조에 따라 대학원에 두는 학위과정, 연구과정 및

률적 근거가 마련되기에 이르렀다.

## (2) 반값 등록금 추진(분발 필요)

과거 이명박·박근혜 대통령 시절부터 정부의 '반값 등록금' 정책은 등록금 자체를 감축하는 것이 아니라, 등록금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장학금 형식으로 정부예산에서 지원하는 것임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설립된 한국장학재단에서 취급하는 국가장학금은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 이외에도, 국가근로 및 취업연계장학금, 기부장학금, 국가우수장학금이 있지만, 이 가운데 반값 등록금 실현을 위한 국가장학금은 통상 소득연계형만을 가리킨다. 소득연계형은 다시 ① 국가장학금 I 유형(학생 직접 지원형): 소득수준에 연계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주어지도록 설계된 장학금 ② 국가장학금 II 유형(대학 연계 지원형): 대학의 적극적인 등록금 부담완화 참여를 도모하기 위해 대학 자체노력과 연계하여 지원하는 장학금 ③ 다자녀 국가장학금: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의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지원되는 장학금 ④ 지역인재장학금: 지역대학의 우수 인재 유치 및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지원되는 장학금이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대통령 선거에서 '반값 등록금'을 공약하며 2020년까지 학생의 부담을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2020년 8월 현재 대통령 임기가 3년을 훌쩍 넘어섰지만, 반값 등록금 실현은 아직 요원한 것 같다. 먼저 국가장학금이 도입된 2012년부터 2020년까지 국가장학금 관련 예산추이를 보면 아래와 같다.

### (표1)연도별 국가장학금 예산(단위 : 억 원)

---

제29조의3에 따라 통합된 학위과정에 입학 또는 편입학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으로부터 입학금을 받을 수 없다.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전체	17,500	27,750	34,575	36,000	36,545	36,346	36,845	36,022	35,474
I 유형	7,500	20,750	28,350	29,000	29,000	28,917	29,416	27,390	23,251
II 유형	10,000	7,000	5,000	5,000	5,000	4,800	4,800	4,800	4,800
지역인재*	-	-	(1,000)	(1,000)	(1,000)	(800)	(800)	(800)	(800)
다자녀	미지원	미지원	1,225	2,000	2,545	2,629	2,629	3,832	7,423

\* 지역인재 장학금은 II유형 금액에 포함됨

자료 : 교육부, 각 연도별 국가장학금 지원계획, 2012~2019 및 교육부, 2020년도 국가장학금 지원 기본계획, 2020.1.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5월 10일부터 집권한 것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는 2018년도 예산부터 현 문재인 정부가 주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하지만 2020년도 예산<sup>7</sup>은 2017년도에 비해 오히려 872억원 감소했다. 특히 2020년 국가장학금 예산 중 I 유형은 2019년과 비교해 전년(2조 7,390억 원) 대비 4,139억 원 감소했다. 구간별 지원액은 변동 없는데, 입학금 수 감소에 따라 장학금 지원 학생 수가 감소한 데에 따른 것으로 설명된다. 이에 반해 다자녀장학금은 2020년 7,423억 원으로 전년(3,832억원) 대비 3,591억원 증가했다. 2018년부터 다자녀 장학금 지원 대상을 다자녀 가정(자녀 셋 이상, 8구간 이하)의 모든 대학생 자녀로 확대한 결과다.

문재인 정부의 '반값 등록금' 공약은 얼마나 실천되고 있는가? 대학 정보 공시 사이트인

---

7 2020년 국가장학금은 2019년과 대비해 몇 가지 달라진 점이 있다. 우선 I 유형은 장학금 수혜 한도를 '현재 재학 학교의 정규 학제'에서 '개인별 총 한도 8회' 부여로 개선(단, 재학 학교 내에서는 정규 학제 내에서만 지원)했다. II유형은 대학 자체노력(등록금 동결·인하, 교내 장학금 유지·확충), 입학금 감축 노력, 지역인재 장학금 지원 등에 지급되는데, 대학 자체 노력은 입학금 폐지분을 반영하고, 입학금 감축 지원 대상에는 사이버대학을 포함했다. 또한 지역인재 장학금의 경우 본·분교 또는 본교·캠퍼스로 구성된 대학은 본교가 수도권이라도 분교 또는 캠퍼스가 비수도권에 소재할 경우도 참여가 가능하도록 했다. 교육부, 2020년도 국가장학금 지원 기본계획, 2020.1. 32면 참조.

‘대학알리미’에 올라온 4년제 대학 연평균 등록금은 2017년 665만 원, 2018년 667만 원, 2019년 669만 원, 2020년 671만 원이다.<sup>8</sup> 그런데 교육부의 ‘2020년도 국가장학금 지원 기본 계획’에 따르면, ‘등록금 절반 이상’을 지원받는 학생은 2017년 53만 5천 명(재학생의 26.5%), 2018년 66만 5천 명(재학생의 30.5%), 2019년 68만 4천 명(31.5%)에 불과하다. 2020년 지원 대상자 기준이 2019년과 같게 적용되기 때문에 ‘등록금 절반 이상’을 국가장학금으로 지원받는 학생 비율이 더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발표에 기초하더라도 ‘반값 등록금’ 혜택을 받는 학생 수가 채 3분의 1이 되지 않는 셈이다.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아직 2년 가까이 남아 있지만, 지금까지의 성과로 볼 때 ‘반값등록금 추진’ 공약 실천은 기대 이하로서 분발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공약이 ‘대학 등록금 부담 획기적 경감’인 만큼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지금처럼 1 유형 예산을 축소할 것이 아니라,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

(3) 학자금 대출 이자 부담 완화(분발 필요)

먼저 2017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학자금 대출 관련 예산을 보면 다음과 같다.

<표2> 연도별 학자금 대출관련 예산과 학자금 대출 금리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증감 (‘20-‘17)
본예산*	2,517		1,976		2,274		2,064		-453
학자금 대출금리(%)	2.50	2.25	2.20	2.20	2.20	2.20	2.00	-	-

8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서울시립대의 2020년 연평균 등록금은 239만 원이다. 국립대의 절반인 셈이다.

\* 한국장학재단 출연금으로서 학자금 대출 지원 외에도 고유사업비, 재단운영비 등을 포함한 금액이다.

학자금 대출은 변동금리인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과 고정금리인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로 구분된다. 2017학년도 1학기 두 학자금 대출 이자율은 모두 2.5%였는데, 문재인 대통령 집권 후인 2017학년도 2학기에는 학자금 대출 금리를 2.5%에서 2.25%로 인하했다. 교육부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을 낮추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2018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도 2.25%에서 2.2%로 인하했다. 2018학년도 2학기에는 장애인 학생의 성적 기준을 폐지했으며, 학점 취득이 없더라도 등록금이 발생하는 초과 학기자도 학자금 대출을 허용했다. 교육부는 2018학년도에 한·미 기준금리 인상 및 시중은행의 평균 대출금리 인상 등 대내·외 금융시장 상황에도 학자금 대출 금리를 동결했다고 밝혔다.<sup>9</sup> 2019학년도까지는 금리변동이 없었으나, 2020학년도 1학기에 2.00%로 0.2% 인하하였다. 2018년 2.25%에서 2.2%로 0.05%p 인하한 이후 2년 만이다. 교육부는 이로써 2020학년도에 약 128만 명의 학생들에게 연간 약 159억 원의 이자 부담 경감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2018년 11월 1.75%에서 2019년 7월 1.50%, 2019년 10월 1.25%로 인하된 것과 관련이 있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가 터지자 기준금리가 2020년 3월 0.75%로, 5월에는 다시 0.5%로 인하되었다. 이런 사정을 감안하면 2020년 1학기 장학금 대출금리 2.00%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으며, 2학기에는 대폭 인하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2020학년도에 학자금 대출 제도가 일부 개선된 점은 평가할 만하다. 먼저 취업 후 상환해야 하는 학자금 대출의 상환기준소득을 현행 2,080만 원에서 2,174만 원으로 상향했고, 일반상환 학자금대출의 지연배상금 부과 방식을 기존 '단일금리(6%)' 방식에서 2020년 신규대

---

9 또한 2018년 11월에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0.25%만큼 상승하여 1.75%가 되었다.

출자부터 '대출금리(2%)+연체가산금리(2.5%)' 방식으로 인하(4.5%)했다. 또한 학기당 150만원 한도에서 최대 4회로 제한했던 생활비 대출 횟수 제한을 2020년 3월 이후부터 폐지해 자율적인 대출 이용환경을 조성키로 했다. 아울러 학자금 대출을 받았다가 중증장애를 입게 되면 원금의 최대 90%를 갚지 않아도 되고, 대출자가 사망한 때에는 상속자가 상속받은 재산 범위 안에서만 변제하면 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과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2020년 4월부터 시행하고 있다.<sup>10</sup>

전체적으로 '학자금 대출 이자 부담 완화' 공약도 '반값등록금 추진' 공약과 마찬가지로 큰 진전이 없으므로, 분발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0.5%임을 감안할 때 시중은행의 조달금리 등을 1.0%로 치더라도 학자금 대출금리를 0.5%는 더 인하할 여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 (4) 대통령선거 공약 이행 총평

앞에서 세부공약을 나누어 살펴본 바에 따르면, 입학금 폐지를 제외하고는 이렇다 할 성과가 없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를 두고 문재인 정부의 의지가 약하다는 비판도 할 수 있겠지만, 정부 출범 당시 여당이 국회의 과반수를 차지하지 못한 탓도 있다고 본다. 2016년 4월 20대 국회의원 총선거(이하 총선)에서 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당시 제1당이 되었지만,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보다 1석 많은 123석밖에 얻지 못했다.<sup>11</sup> 현 정부 출범 후 진보정당인 정의당 의석 6석을 더하더라도 과반수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여당이 진보적 의제인 대학 등록금 완화 정책을 과감하게 실현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sup>12</sup>

---

10 [http://moonmeter.kr/detail.jsp?sp\\_no=754](http://moonmeter.kr/detail.jsp?sp_no=754).

11 야당인 새누리당 122석, 국민의당 38석, 정의당 6석, 무소속 11석이었다.

12 물론 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1대 총선 직전 선거법과 검찰개혁법 등 몇 가지 개혁과제에 대해

## 2. 2020년 4.15 총선 여당의 대학등록금 관련 공약 평가

### (1) 여당의 압승

2020년 4월 15일 21대 총선에서 여당은 코로나 사태 대응에 대한 긍정적인 여론으로 인해 유례없는 압승을 거두었다. 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180석, 미래통합당(새누리당 후신) 103석, 정의당 6석, 열린민주당 3석, 국민의당 3석, 무소속 5석을 얻었다. 열린민주당이 더불어민주당과 이념적으로 동일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與圈이 국회선진화법의 장애<sup>13</sup>를 극복하고 개혁과제를 과감하게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

### (2) 정당들의 총선 공약 비교<sup>14</sup>

#### 1) 대학등록금 관련 공약

이번 총선에 참여한 주요 정당의 공약을 비교하면 아래 표<3>과 같다.

#### <표3> 등록금 관련 총선 공약 비교<sup>15</sup>

---

서는 보수 성향을 지닌 일부 야당과 연대하여 법개정에 성공한 적도 있었으나, 보수와 진보의 대결이 첨예한 대학등록금 문제에 대해서 그와 같은 협조를 얻어 내기는 힘들었다고 본다.

13 이 법에 따르면 국회 내 다수당(과반수)이라 하더라도 의석수가 180석에 미치지 못하면 예산안을 제외한 법안의 강행 처리는 불가능하다.

14 대학교육연구소, 21대 총선 대학 관련 공약 검토, 현안보고 통권 19호, 2020.4. 2면 이하를 참조했음을 밝힌다.

15 대학교육연구소, 위 현안보고, 2면에서 인용.

정당	주요 공약
더불어 민주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립대 명목 등록금 반값으로 인하(419만원→210만원)</li> <li>• 사립대 국가장학금 확대 : 저소득층 연간 520만원→736만원(사립대 평균 등록금 100% 수준), 소득7구간 120만원→220.8만원(30% 수준), 8구간 68만원→147.2만원 (20% 수준) 으로 확대</li> <li>• GDP 대비 고등교육 재정 OECD 평균 수준 달성</li> </ul>
미래통합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자녀(3자녀 이상) 국가장학금 지원 시 소득제한 폐지</li> </ul>
민생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공립대 무상 등록금</li> <li>• 사립대 과도한 적립금 축적을 제한해 등록금 인하 추진</li> </ul>
정의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문대부터 무상교육 : (1단계) 국공립 및 공영형 사립 전문대 무상교육 → (2단계) 국공립대 및 공영형 사립대 무상교육 → (3단계) 공영형 외 사립은 가처분소득 감안 한 표준등록금으로 등록금 절반</li> <li>•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 고등교육 예산 확충하고 지역균형 및 학교특성 고려해 총액 교부 등</li> </ul>

제1 보수야당인 미래통합당을 제외하고는<sup>16</sup> 여러 정당이 실질적인 반값등록금 또는 무상교육을 공약으로 내세운 점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대학등록금과 관련하여 정의당이 가장 진보적이며 계획적인 공약을 했음을 알 수 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

16 박근혜정부가 2015년 국가장학금 4조원과 대학 자체 장학금 3조원을 합한 7조원으로 '반값등록금이 완성됐다'고 발표한 이후, 대학등록금과 관련하여 특별한 공약을 내지 않고 있다.

이 국공립대와 관련하여 민생당과 정의당에 달리 무상교육이 아니라 반값등록금 정도만을 공약한 것은, 비중이 더 높은 사립대와의 형평을 고려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과거 19대 국회에서는 1호 법안으로 소속 의원 전원이 서명하여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을 제출하였으나, 이번에는 OECD 평균 수준으로 'GDP 대비 고등교육재정'을 확대하겠다고 공약한 데에 그친 것은 아쉽다. 하지만 21대 국회 임기 내에 집권여당의 공약만이라도 이행된다면, 대학 무상교육이라는 장기 목표로 가는 데 하나의 큰 디딤돌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2) 학자금 대출 관련 공약

이와 관련하여 주요 정당의 공약을 비교하면 아래 표<4>과 같다.

<표4> 학자금 대출 관련 총선 공약 비교<sup>17</sup>

정당	주요 공약
더불어민주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학원생도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 대상에 포함</li> <li>• 학자금 대출 금리를 조달금리 수준(1.6~1.7%)으로 인하</li> <li>• 2009년 이전 고금리 학자금 대출자 및 2010~2012년 일반 학자금 대출자에 대한 저금리 전환대출 적용</li> <li>•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도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지원 대상에 포함</li> </ul>
미래통합당	없음

<sup>17</sup> 대학교육연구소, 위 현안보고, 5면에서 인용

민생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립대 학생에게 학자금 무이자 대출</li> </ul>
정의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학원생도 취업후 학자금 상환 대출 대상에 포함</li> <li>• 신규 학자금 대출 무이자 및 장기 연체 학자금 대출 탕감</li> <li>• 예전 고금리 대출 저금리 전환</li> <li>• 파산절차 시 채권 면책 대상에 취업 후 학자금 포함</li> <li>• 신용회복위원회 '청년신용회생제도 도입' 등 청년 대상 신용회복 사업 추진</li> </ul>

민생당과 정의당은 학자금 대출 무이자를 공약한 반면,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조달금리 수준(1.6~1.7%)으로 낮추겠다고 공약했다. 여당이 현재 2.0%인 학자금 대출금리를 0.3~4% 정도까지만 경감한다는 것인데, 2016년 20대 총선에서 '든든학자금 대출 무이자 추진'을 공약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후퇴한 공약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전의 고금리 학자금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공약했다. 지난 3월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2009년 이전 학자금 대출자를 대상으로 저금리 전환대출을 1년간 시행함으로써 고금리로 인한 상환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방안을 마련한 바 있는데, 이를 2009년 이후 대출자에게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이라 할 수 있다. 근래 학부는 대출자와 대출액이 국가장학금의 영향으로 대폭 주는 반면, 대학원 대출자와 대출액은 상당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sup>18</sup>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대학원생 취업 후 상환 대출'을 공약한 것은 학문후속세대 양성이라는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18 2012년 대비 2018년 1학기 학자금 대출 현황을 살펴보면, 학부는 대출자가 25.6% 줄고, 대출액도 42.9% 줄어든 반면, 대학원 대출자는 같은 기간 18.8% 늘고, 대출액도 21.6% 늘었다. 대학교육연

### 3. 전망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대선공약의 이행 정도가 상당히 미흡한 실정이고, 이번 21대 총선 공약도 과거 야당일 때의 공약에 비해 후퇴한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현재 미증유의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천문학적인 국가예산이 추가로 필요한 점을 감안하면, 대학등록금 관련 여당의 총선 공약만이라도 제대로 이행될 수 있을까 걱정이 앞선다. 지난 5월 코로나 사태로 인한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을 상대로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을 지급하였으나, 8월 들어 다시 코로나의 대폭 확산이 우려되자 제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할 상황이다. 하지만 보수야당뿐만 아니라 예산 담당 관료들과 여당의 유력한 대통령 후보 중 한 명이자 8월 말에 새로 선출된 여당 대표조차도 예산 상황을 고려하여 전 국민에게 지급하지 않고 취약계층에 한정해 지급할 것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대학등록금 관련 여당 공약, 특히 '반값등록금 실현' 공약의 이행 전망은 그다지 밝지 않다고 예상된다. 더구나 정부·여당은 8월 26일 고교 무상교육을 당초 계획보다 1년 앞당겨 내년부터 전면 실시하기로 했는데, 이는 옳은 결정이지만, 이로 인한 예산부족을 이유로 대학등록금 관련 공약이 영향을 받을까 우려된다. 재벌기업의 광고료에 의존하면서, 약육강식의 신자유주의를 대변하는 언론사가 대부분인 현재의 언론 환경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현재 상황에서 가능한 최대치를 확보함으로써, 장차 대학교육까지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는 유럽적 사고에 기초하여 패러다임이 전환될 것을 기대한다. 특히 수천억대의 적립금을 두고 있는 사립대의 적극적인 행보를 촉구한다.